

특검, 박채운씨 '뇌물공여' 구속영장 청구

(비선진료 의혹 김영재 원장 부인)

안중범 전 수석측에 명품가방 등 뇌물공여... 김영재 원장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방침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운(4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10시 박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박씨는 김 원장에게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안 전 수석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과 금품을 건네고 의료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코스메틱은 의료용 실 개발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5억원의 특혜성 예산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박씨는 관련 제품을 서울대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당시 청와

대 주치의였던 서창석(56) 원장에게 다리를 뇌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에 출입하고 수차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와이제이코스메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컨설팅 회사에는 사할과 세무조사로 보복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정만기(58)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차관은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으

로 재직하면서 김 원장측에 15억원의 특혜성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 차관을 상대로 김 원장측에 예산 지원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원장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자문관이 아닌데도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당, 반기문 하차 후 '문재인 때리기' 총공세

국민의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 하차 직후인 2일 일제히 지지율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 반 전 총장 중도하차를 계기로 '문재인 때리개'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반 전 총장 중도하차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한 열의를 한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올라가고, 안희정 충남지사에게도 (반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갔지만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10%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 수혜를 받았지만 문 전 대표의 지지도는 약 6.7%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된다면 문 전 대표는 굉장한 지지도가 하락할 것"이라며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부세력들이 많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지지율은 한때 30%를 웃돌았다"며 "지지율은 선거주와 같다는 정치권을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뉴시스



국민의당 창당 1주년 기념식.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국민의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신이 붙은 '국민의당 집권' 글씨가 있는 족자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승용 원내대표, 박지원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권노갑 상임고문.

김영재 특혜 의혹' 정만기 차관 특검 출석... '최순실 개입 몰랐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 차관은 이날 오후 1시53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차관은 "미안마 K타운 사업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을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김영재 의원의 중도 진출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정 차관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재직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 의원에 15억원의 특혜성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께 산자부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소유한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코스메틱에 15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했다. 이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지원을 안중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 안 전 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정 차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비서관이었던 정 차관이 산자부 R&D 소관부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정 차관을 상대로 예산지원 경위와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 차관은 미안마 K타운 사업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K타운 사업이 난항을 겪자 미안마 정부 추진을 받은 M사 관계자를 참석시킨 대책회의를 여는 등 사업을 총괄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 정 차관의 소환조사에서는 미안마 K타운 사업 관련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뉴시스

문재인 "신혼부부 반값 공공임대주택 필요하다"

"일자리·주거비가 결혼 어렵게 만들어" ... "혁신도시 공기업이 지역인재 30% 채용해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주택정책과 관련, "반값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LH공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젊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결혼하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하나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가 주거비가 비싼 것"이라며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것, 또 하나는 보다 저렴한 주거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해야만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LH공사의 부담으로만 할 수는 없다"며 "예를 들면 그린벨트 부문을 신혼부부주택용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땅값 부담을 줄여주면 LH공사가 반

값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 "지금 혁신도시에 내려온 공기업·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고용하게끔 규정해 있는데 그것이 얼마 이상 하라고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라고 말한 뒤, "적어도 지역인재를 30% 정도는 채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우상호 원내대표 "2월 국회 핵심과제는 재벌·검찰·언론 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빈부격차 해소·한반도 평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재벌·검찰·언론 등 3대 개혁을 2월 임시국회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 재벌, 검찰, 판도,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 탄핵 같은 현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합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과제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다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한

삼법 개정안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등을 제시했다.

검찰개혁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통과, 언론개혁 과제로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송법 통과 등을 지목했다.

우 원내대표는 "보수 집권 10년은 총체적인 실패 그 자체"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보수 집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사드 배치 역시 균형외교 기조 하에 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꼽았다.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과제 ▲복지지원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 촘촘한 복지망 구성 등을 약속했다.

또 한반도평화를 위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교류 재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주문했다. 그는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소득향상 3법, 생활비 절감 3법 등 민생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 ▲고 백남기농민 특검 도입 ▲성평등법제 논의 기구 설치 ▲조류독감(AI) 피해 구제책 마련 ▲5·18 특별법 개정 ▲주변국과 갈등 관리 등 사회개혁과제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뉴시스

潘 따라가려던 새누리 의원들 '당혹' ... 탈당 안할 듯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반 전 총장과 정치행보를 함께하겠다며 탈당을 고민해온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당분간 탈당을 보류하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 총정권 의원을 제외하고 반 전 총장을 돕겠다고 탈당을 고민하거나, 바른정당 입당을 저울질한 의원들은 심재철, 나경원, 강석호, 윤한홍, 정유섭, 이철규 의원 등이다. 이들은 반 전 총장이 전날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당분간은 탈당을 보류하기로 다닥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소식을 접하고 당혹스럽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탈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 남아있어야지 어디를 가느냐"고 잔류 의사를 밝혔다.

정유섭 의원도 통화에서 "반 전 총장에 그치게 지켜가지만 해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반나절만에 이렇게 되니 당황스러웠다"며 "새누리당에 남아서 대통령 탄핵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 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노력하겠다"고 잔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역시 잔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반기문 전 총장 개인이나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에는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만든 역사적 인물인 반 전 총장에 대하여 귀국하시지마자 우리 정치권이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이인제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 되겠다"

이인제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job을 만드는 대통령·통일의 문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경제, 교육, 노동, 복지 등 내각제로,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외정은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꿔야만 연정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분권형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사회개혁을 왜든나머지라도 빠르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넓고 후진적인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을 유연한 선진국 수준의 시장을 바꾸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탄핵을 반대해왔고, 국민들은 화가 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야당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한 정치,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 행복을 키워야 한다"며 "현정에서 큰 혼란이 생기면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일관되게 탄핵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제용 기자

'알선수재' 혐의 최순실, 특검 재소환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이날 오전 10시11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한 최씨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는 전날에도 특검팀에 강제소환 돼 약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해 정부의 '미안마 K타운 프로젝트'에 미안마 현지 회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K타운 사업은 미안마에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할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다.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최씨가 이란 K타워 사업과 마찬가지로 미안마 K타운 사업에도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유재경(58) 주미안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대사는 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뒤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특검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특검팀에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돼 압송되는 과정에서 최씨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특검팀은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최씨가 허위사실로 특검의 명예를 훼손한 데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최씨는 지난달 30일 "강압수사에 대한 특검의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의 소환통보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각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